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VOL.32

2024.8.1.~2024.8.31.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□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(8.1.)

- 1일 중견련은 한국경영자총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제인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'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' 발표
-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·사용자·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기업들에 위험을 부과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 요청

□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(8.5.)

- 중견련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포함한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, 국회 여야의 장기적·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당부

□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(8.8.)

- 중견기업의 73.4%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'기업 경쟁력'과 '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'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중견기업의 70.1%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

□ 최진식 중견련 회장-김완기 특허청장 간담회 (8.9.)

- 중견련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력 기반으로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·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, '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', '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' 등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 전달
-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·활용·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이겠다고 밝힘

□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(8.14.)

- 중견련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및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확산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·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
-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%에서 40%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,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.1%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, 상속세 최고세율을 30%로 더욱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

□ 중견련-수출입은행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 (8.22.)

- 중견련은 22일 한국수출입은행과 '한국수출입은행-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' 개최
-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컨설팅 지원 신설 및 수출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

□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(8.28.)

- 중견련은 28일 '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'에서 중견기업의 47.4%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 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고 밝히며, '개선되지 않았다'는 응답은 12.0%에 그침
-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.5%는 국내·외 경제·사회 환경에 발맞춰 '금융지원(26.6%)', '세제지원(23.4%)', R&D 지원(14.2%)', '인력지원(11.7%)'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힘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동향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(8.7.)

-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'시정방안 제출제도' 시행
-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 제출 기회 부여 및 제출된 방안을 고려한 시정조치 부과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슈퍼 을(乙)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 (8.20.)

- 슈퍼 을(乙)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▲(슈퍼 R&D) 과감한 도전을 통해 기술역량 확보 지원, ▲(슈퍼 패스) R&D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위한 개방형 혁신 지원, ▲(슈퍼 성장 패키지) 금융·세제, M&A, 인프라 등을 지원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통상정책 로드맵 (8.22.)

- ▲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%까지 확대, ▲아세안·인도·중동·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새 수출시장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방향 발표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(로드맵) 고도화 (8.27.)

- ▲(소자)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차세대 옴스트롱 소자 원천기술 선도, ▲(설계) 핵심 4대 반도체 설계기술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신시장 개척, ▲(공정) 첨단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 확보로 소재·장비·공정 기술 고도화 등을 발표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입법동향

1 정부

- **[산업통상자원부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8.1.)**

 -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·동반형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①업종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, ②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판단범위 설정, ③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음
- **[환경부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(8.6.)**

 -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(5년)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, 외부 감축 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 규정 등의 내용 제정
- **[중소벤처기업부]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8.13.)**

 -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해 ①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, 적용되는 유예기간 확대(3년 → 5년), ②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할 경우 유예기한을 5년으로 확대
- **[행정안전부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(8.14.)**

 - ①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(~'27.12.31.), ②「법인세법」에 따른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재설계 및 일몰기한 연장(~'27.12.31.) 등을 규정
- **[공정거래위원회]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(8.19.)**

 - ①분쟁조정 관련 절차·효과 등을 체계적 일괄 정비, ②간이 조정절차, 감정·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자치 신설·보강, ③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능동적 역할 부여 등을 규정
- **[기획재정부]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(8.27.)**

 - 정부안에는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추가반영
- **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8.29.)**

 - ①기술의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일부 납부할 경우 납부기준인 납부요율 현행대비 1/2 수준으로 하향, ②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 상향(50% → 60%) 등의 내용 제정

2 국회

✓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 의원, 8.2.)

- ▲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한도 확대(3배 → 5배), ▲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

□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(이주언 의원, 8.8.)

- ▲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, ▲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, ▲반도체 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

□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 의원, 8.19.)

-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욱 의원, 8.20.)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50% 이상 지원하도록 규정

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연욱 의원, 8.21.)

- ▲산업기술 해외 유출·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, ▲산업기술의 취득·사용·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 20억 원을 초과 시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병과 등 제정

□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 의원, 8.27.)

-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,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 단축(2개월 → 30일)

✓ 법제사법위원회

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 의원, 8.5.)

- ▲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 부여, ▲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 면책 부여

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 의원, 8.9.)

-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, 주요 안건에 관한 의결권 제한, 다중대표소송 요건, 주주총회 소집 통지, 이사 보수 결정과정 등에 관해 지배주주 및 일반주주들의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항 개편

✓ 정무위원회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 의원, 8.16.)

-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여

□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(김남근 의원, 8.20.)

- ▲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, 배출량, 장기·중기·단기의 감축 목표 및 감축 전략 등 수립, ▲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'세이온클라이밋' 제도 도입, ▲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의 이익,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 규정, ▲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·해임 시 3%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 3% 이내로 제한 등을 제정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 의원, 8.27.)

- 상장법인이 환경·사회·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·공시

✓ 기획재정위원회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 의원, 8.8.)

- 본점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획발전특구내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상속의 공제 한도 2배 상향(최대 1,200억원)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 의원, 8.8.)

-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추가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 의원, 8.20.)

-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상향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욱 의원, 8.20.)

-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▲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제혜택 제공, ▲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연욱 의원, 8.21.)

-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

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 의원, 8.22.)

- ▲중소·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, ▲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·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제정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규근 의원, 8.22.)

- ▲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%까지 가감, ▲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정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 의원, 8.28.)**

- ▲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해 30%의 세액공제를 적용, ▲최저한세 규정의 적용 배제

✓ **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**

□ **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장겸 의원, 8.6.)**

- ▲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·기획 사업에 대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, ▲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는 회사 참여 허용

□ **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(배준영 의원, 8.28.)**

- ▲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규정,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 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정

✓ **환경노동위원회**

□ **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 의원, 8.7.)**

- ▲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확대(90일 → 최장 180일), ▲가족돌봄휴가 확대(10일 → 30일) 등 유급으로 지원

□ **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 의원, 8.13.)**

-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

□ **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 의원, 8.13.)**

- ▲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 금지, ▲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추가, ▲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**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 의원, 8.20.)**

-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

□ **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 의원, 8.29.)**

- ▲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규정, ▲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,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

✓ **국토교통위원회**

□ **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 의원, 8.23.)**

-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지원사업

- **[산업통상자원부]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(8차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(8.7.)**

 - 9월 5일까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, ▲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, ▲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·부품 기술개발 지원
- **[산업통상자원부] 2024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(R&D)사업 신규과제 공고 (8.16.)**

 - 9월 5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·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신규 과제 신청
 - 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권역 내 소재 기업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▲기술개발 지원, ▲테스트베드 구축 지원, ▲인력양성 지원 등을 지원
- **[산업통상자원부]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(라이징 리더스 300) 4회차 선정 공고 (8.26.)**

 - 9월 6일까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기업 모집
 - 선정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▲(우리은행) 여신한도, 금리우대 등 지원프로그램, ▲(KOTRA) 맞춤형 해외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, ▲(KIAT) 우수 연구인력 확보 지원 등을 지원
- **[산업통상자원부]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 추가 모집 (8.28.)**

 - 9월 29일까지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▲온실가스 감축시설과 연구개발(R&D)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70억 원 규모의 용자 추가 지원, ▲철강·시멘트·수소·알루미늄·비료·전력 산업 관련 프로젝트 선정평가 시 가점(2점) 부여 등을 지원
- **[산업통상자원부]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(9차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(8.29.)**

 - 9월 27일까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며, ▲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, ▲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·부품 기술개발 등을 60.75억 원 규모로 지원